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216억 조기집행

##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노후 터널 보수

정선국토관리사무소(소장 허현구)가 정선과 평창·영월·삼척 지역의 총 사업비 361억원 가운데 60%인 216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고 잦은 곳 개선과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 등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에 27억원, 도로 포장과 보수 및 낙석 위험구간·배수시설 정비 등 국도 유지 보수사업에 96억원을 투입한다.

또 노후 교량 개축 및 교량·터널 보수와 터널 방재시설 등 도로 구조물 기

능개선에 221억원, 교차로 개선 4억원, 위험도로 개량 13억원 등을 투입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허현구 소장은 “재정집행 계획 수립과 점검회의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조기 재정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방기준 kjbang@kado.net

## 아하! 그렇구나

### 공동수급체의 채무 ②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인데, 공동수급체(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조합)의 채권자는 채권 전액에 관해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재산을 목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 23238 판결).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고유재산에까지 미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채무에 대해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즉, 하도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에게 그 구성원이 부담하는 손실비율에 따라서(분담비율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균등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712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분담비율에 따른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구성원 전원을 피고로 삼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운데 어느 한 구성원이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구성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13조).

공동수급체의 채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요컨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명의로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하도급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건설업 불법대여 철폐... 제재 잇따라

〈등록증〉

올들어 사법처리 증가  
건축법 시행규칙도 개정  
업체들 경각심 높아져

건설업계의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근절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올들어 경찰수사와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고, 초기단계 수준이지만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기 시작했다. 업체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와 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2월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534곳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업등록증 서류를 빌려주고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서 등록증을 빌려 공사한 무자격 건축업자 240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관련기사 3면

이뿐이 아니다. 앞서 12월에는 등록증 불법대여를 한 2개 업체가 인천지검에 송치됐고, 4개 업체에 대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1월에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37건, 249명을 검거했다. 이 중 182명은 전국 1613곳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 주고 46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 같은 경찰수사는 건설업계가 건설업 불법대여 행위 근절 노력을 벌이면서 나타난 성과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013년



**신월빛물저류 배수시설 공사 한창**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빛물저류 배수시설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배수시설 확충 작업을 하고 있다. 2017년 배수터널이 완공되면 양천, 강서지역에 장마철 집중호우 시 40여m 지하의 직경 10m, 길이 3.6km 배수터널에 32만t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11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건축공사 때는 산업재해보상 등 문제로 기술자 등 근로인력현황을 담아 근로복지공단에 현장개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단기간에 착공을 많이 한 업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현장개소 신고서 자료를 확인하면 불법대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후 건설협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협조를 받아 등록증 대여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확인 작업에 돌입한 후, 이를 근거로 의심업

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서울 10개사, 경기 17개사, 인천 8개사 등 총 35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처벌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근절 노력은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현장 중복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 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의 성명·자격증·자격번호를 기재도

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13일자로 개정됐다.

인천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대여 유혹에 빠졌지만, 처벌이 잇따르면서 업체들 사이에서 벌금, 건설업 등록 말소 등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불법대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